

광주시,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신청 '딜레마'

내일 신청서 마감...지역 재계 "미래차 대전환 위해 유치 필요" 압박 전남과 1호 상생사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영향 우려 막판 고심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 2곳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시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 지원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1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남도와 공동으로 도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여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선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지역 경제계에선 "자동차 도시인 광주

가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반드시 지정받아야 한다"며 광주시의 신청서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계속 준비해 온 사업인 만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도체 특화단지, 미래차 산단 등과 어떻게 꾸밀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면서 "11일까지 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하겠다"며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다.

산업부는 현재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공급망 경쟁에 대응해 바이오, 미래차 관련 소부장 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추가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1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2021년 2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SK하이닉스), 충북 청주(LG에너지솔루션) 등 5곳은 생산, 수출, 고용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도 그동안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준비에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달 광주 미래차 산업

단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소부장 산업과의 연계 육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다만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전남도와 함께 도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느라 최종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민선 8기 제1호 상생협력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 2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다. 산업부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담당 부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각에선 산업부가 광주의 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안배 등을 핑계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배제하고,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배정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광주경영자협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2040년까지 내연차 판매 급증을 예상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기업의 미래차 대전환 실패 시 기업 존폐는 물론 광주지역 경제의 최대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가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 R&D, 기업 지원, 인력양성, 세액공제, 규제개선 등의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대한조선(주)-해남군, 회원산단 개발 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대한조선(주) 김광호 회장, 명현관 해남군수와 함께 '전남도-대한조선(주)-해남군 회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배후단지 개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2025년까지 해남 회원산단에 해상풍력 연안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 및 산단 지원항만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전남도제공>

전남 조선 인력 3100명 양성

현대삼호중, 2년간 일감 확보...국·도비 투입 취업 지원·직무 교육

전남도가 최근 조선업 수주 현황에 따른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생산 인력 3100여 명을 양성하는 등 부족한 인력 수급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대표 조선소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해 2025년까지 일감을 확보했다. 대한조선도 2024년까지 일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신규 인력 양성 및 숙련공 고용, 지역 정착 등을 위해 국·도비를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400명을 지원한다. 또 289명에게 조선업 내 일체유공제를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지역 혁신 플랫폼에선 친환경선박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745명을 교육·양성한다.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300명에게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기능 인력 훈련수당을 265명에게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을 200명에게 지급해 기술 숙련 근로자 채용을 유도한다. 또 현장 및

출형으로 외국인 생산인력 160명 양성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직무역량을 사전에 교육한 후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주비자(F-2)를 5년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월 1차 교육을 수료한 23명이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3월 2차 교육 수료자 35명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서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위한 핵심 현안인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력도 적기에 양성해 생산현장 인력 부족에 송풍이 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문화도시'로 글로벌 외교 보폭 확대

강기정 시장, 주한 대사 잇단 면담 '광주 세일즈'... 20개 국가와 교류

민선 8기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문화도시의 힘을 양 날개로 도시 외교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기정 시장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시작으로 독일, 일본, 중국, 영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프랑스, 베트남 등 대표와 접견이나 영상회의를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광주를 방문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핀란드, 스페인 등 19개국 주한 대사를 만

나 AI, 자율주행차 등 광주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관계를 다졌다.

강 시장은 특히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연계 전시인 9개 국가 파빌리온 개막식에 잇따라 참석해 문화예술 교류의 선봉장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스위스·인도·오스트리아·페루 등 그동안 광주와 특별한 접점이 없었던 주한 대사들까지 연이어 만나 협력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신규 교류 도시 발굴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상생 공영'의 국제도시 브랜드를 홍보

할 계획이다. 또 국제기구, 민간 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해외 자매-우호 도시와 새로운 협력 사업을 추진해 문화교류, 의료관광 홍보, 대학 교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초청 연수 등 교류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도시 외교는 각 도시만의 고유한 경험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의 도시, 5·18 등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기후 회복 도시, AI·빅데이터 선도도시라는 광주만의 경험을 기반으로 도시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신청하세요

화재시설 등 개선 최대 2000만원

전남도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사업 신청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총사업비 8억원을 들여 안전 점검비, 외벽 누수 및 균열 보수, 화재 대비시설, 경비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등 사업에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기습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가 발

생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물막이 설비, 지하층 및 1층 출입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주상 복합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77개 공동주택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 사전 해소로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